



주간통일정세 2010-50(2010.12.06~12.1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50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김정일, 함경북도예술단 공연 관람(12/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통신이 밝힘.
 - 통신은 김 위원장이 공연을 관람하고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관람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이날 공연에서 예술단은 여성3중창 ‘만경대의 노래’와 여성민요독창 ‘회령의 봄’, 무용 ‘김철의 불길’ 등을 무대에 올림.
 - 공연 관람에는 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홍석형(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부장 겸직)과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직), 박도춘(당 비서 겸직) 외에 현철해·리명수 국방위원회 국장, 오수용 함북도 당 책임비서, 한홍표 함북도 인민위원장이 수행함.

- **北김정은 “3년 내 쌀밥에 고깃국” (12/6, 요미우리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3년 내 주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도록 하겠다고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내걸었던 목표를 다시 들고나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
 - 이 신문은 선양발 기사에서 중국과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 이처럼 전했다는 보도
 - 이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달 초순께 평양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3년 내에 국민경제를 1960~1970년대 수준으로 회복시켜 (김일성 주석이 목표로 내걸었던)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사는’ 생활수준을 달성해야한다”고 말함.
 - 신문은 이 회의가 경제관련 회의로 보이며,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주최했고 기업 경영자와 경제전문가 등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이는 김정은이 조부의 위광을 배경으로 경제 재건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겠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해석
 - 이 신문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9월 이후 ‘과거에는 식량이 없어도 탄환이 없으면 안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탄환은 없어도 식량은 있어야 한다’는 등의 경제 중시 발언을 해왔다”고 전함.



● 北김정일, 김책제철 현지지도(12/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청진시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이하 김책제철)와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이하 라남탄광기계)를 현지지도했다고 통신이 이날 보도
-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김책제철의 ‘주체철’ 용광로직장(생산라인) 등을 돌아본 뒤 “경제의 중요 부문에서 자립성이 강화됨으로써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자원, 자기 기술로 자립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면서 “간구한 투쟁을 통해 진리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이 노선을 경제건설의 변함없는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은 “(김책제철의) 노동계급이 성공시킨 주체철 생산방법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애국자들만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라면서 “철강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컴퓨터수치제어)화를 실현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
- 김 위원장은 또 같은 청진시에 소재한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기계조립장을 시찰하고 “자립적 민족경제 토대를 다지고 위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이 연합기업소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새 제품의 생산을 급격히 늘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라”고 지시함.
- 이어 김위원장은 “공장의 CNC화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해 높은 과학기술 고지를 향해 계속 돌진해야 한다”고 지시,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상징하는 ‘CNC’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함.
- 김 위원장은 이어 “금속, 기계, 채취 등 기간공업을 많이 갖고 있는 함경북도는 나라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끄.
- 이번 시찰에는 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홍석형(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부장 겸직)와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직), 박도춘(당 비서 겸직) 외에 현철해·리명수 국방위 국장, 오수용 함북도 당 책임비서가 수행함.

● 北, 연평도 포격 후 김정일 경호 강화(12/8, 데일리NK;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경호를 대폭 강화했다고 데일리NK가 보도.
- 이 매체는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 “1호 행사’(김정일 위원장이 참가하는 공개행사)에는 호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이 동원됐지만 이번 함경북도 일대 현지지도에는 인민군 9군단 내 보위부와 위수경무부, 국경경비총국까지 동원돼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고 밝힘.
- 특히 경호에 동원된 인민군 ‘9군단’은 함북도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로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길주군 풍계리와 미사일 발사 기지인 화대군 무수단리 등 특수시설을 담당하고 있음.



- 이 소식통은 “모든 (9군단의) 경호 성원은 군복을 벗고 사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담당 구간의 도로와 철도 주변을 경계했다”며 “경비에 동원된 인원들은 심야에도 집으로 돌아가거나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채 잠을 자고 돌아가면서 야간 경비업무 수행했다”고 말함.
- 이어 “장군님(김정일)의 현지도에 대해 담당지역 보위부 보위지도원에게는 하루 전에 알려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가족에게 ‘관할부대에 훈련지도 나간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할 정도로 통제가 심했다”며 “매복에 나선 근무자에게는 불도 못 피우게 하고 흡연도 금지했다”고 소개
- 그는 “청진에서 무산, 회령으로 나가는 도로에는 모든 사람과 자동차가 통제됐고 회령 제12교화소가 있는 회령시 풍산리 주변에는 호위 성원이 두 배나 배치되기도 했다”고 덧붙임.

● 北김정은 우상화 그림 발견(12/8, 글로브 앤 메일)

- 북한에서 후계자 김정은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발견됐으며, 이는 김정은에 대한 대대적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됨을 알리는 신호라고 캐나다 일간 글로브 앤 메일이 보도
- 7일(현지시각)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방북한 캐나다인 퍼시 톱 변호사가 김정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그림을 함경북도 나선시의 나진 미술관에서 촬영, 이 신문에 제보함.
- 제목이 없는 이 그림은 성당 등 서양식 건물이 있는 풍경을 배경으로 북한식 교복 차림의 한 학생이 거니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이 신문이 여러 북한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대다수가 그림 속 인물이 김정은으로 추정된다고 답함.
- 다만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이 인물이 김정은이 아닌 “김일성이다. 배경과 교복을 보면 의심의 여지없이 1920년대다”라고 밝히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그림의 정체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신문은 밝힘.

● 中 다이빙귀 방북, 김정일 면담(12/9, 신화통신;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날 평양에서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다이빙귀(戴秉國) 국무위원을 만났다고 중국 신화통신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이날 접견에 중국측에서 장즈진(長志軍) 외교부 부부장,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아이핑(艾平)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치우위안핑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대사가, 북한측에서는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이 배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다이 국무위원은 연평도 포격도발 발생 나흘 뒤인 지난 달 27일 방한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한데 이어 이튿날인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2시간여 면담한 바 있음.

- 다이 국무위원은 방한 후 귀국해 곧바로 방북을 시도했으나 김 위원장의 지방 현지지도 등을 이유로 방북이 미뤄져왔음. 다이 국무위원은 지난 8일 평양에 도착해 강석주 내각 부총리와 먼저 회담했으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북·중 양측이 양자 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대화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 중국의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이 국무위원이 오늘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했다”고 확인하고서 “그 이후의 소식은 없다”고 밝힘.

● 北김정일, 평양시내 공장·백화점 시찰(12/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시의 평양양말공장 등 경공업 공장과 새로 건설된 보통강백화점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함.
- 김 위원장은 12월 7일공장 내 위생용품 ‘분공장’(分工場, 본 공장과 별도로 건설한 공장)을 둘러보고 “실리주의 원칙에 맞게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생산을 과학화해 제품의 원 단위 소비기준을 낮춰서 인민들에게 질 좋은 위생용품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
- 또 평양양말공장 여성양말직장(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질 좋은 양말을 더 많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더 유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자”고 말했다고 통신이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은 이어 새로 건설된 보통강백화점을 방문해 시설들을 살펴보고 “인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상품을 제때에 팔아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힘.
- 이날 현지지도에는 당 정치국 위원인 김경희(당 경공업부장)와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문경덕(당 비서) 등이 수행함.

● 北김정은, 2주만에 공개활동 확인(12/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말 이후 약 2주만에 공개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됨.
- 통신은 10일 저녁 김 위원장이 평양시의 평양양말공장 등 경공업 공장과 보통강백화점을 시찰했다고 전하면서 수행원 명단에서 김정은은 거명하지 않았음. 그러나 11일 오전 조선중앙TV가 김 위원장의 시찰 사진 117장을 공개하면서 김정은이 수행 인물로 동행한 사진 4장을 내보냄.
- 사진 속의 김정은은 평양양말공장과 보통강백화점에서 김 위원장이 시설물을 둘러볼 때 2~3m 뒤에서 다른 수행원들과 함께 앞으로 손을 모은 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모습이었음.



- **北박봉주 전 총리, 김정일 시찰 수행(12/11, 조선중앙TV)**
 - 북한 경제개혁 조치에 앞장서다 해임된 후 3년 4개월 만인 지난 8월 노동당 제1부부장으로 복귀한 박봉주(70) 전 내각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양말공장 현지지도에 수행한 것으로 11일 확인
 - 조선중앙TV는 이날 김 위원장의 평양양말공장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박 전 총리가 김 위원장의 지근 거리에서 수행하는 모습의 사진 5장을 내보냄.
 - 박봉주는 임금 및 물가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2002년의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앞장서 추진해 2003년 9월 총리가 됐으나, 시장 확산에 따른 '황색 바람'(자본주의 풍조) 문제를 제기한 당과 군부 실력자들의 견제로 2007년 4월 총리직에서 해임된 후 평안남도 소재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됐었음.

- **北김정일, 이틀째 평양 경공업공장 시찰(12/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틀째 평양시의 경공업부문 산업시설을 현지 지도함.
 - 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평양밀가루가공공장과 선홍식료공장, 향만루 대중식당을 현지지도했다고 11일 오후 보도
 - 김 위원장은 평양밀가루가공공장에서 "CNC(컴퓨터수치제어)화를 실현한 파배기·빵·과자 직장(생산단위) 등을 돌아본 뒤 만족을 표시하면서 생산공정의 무인화 실현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밝힘.
 - 그는 또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고급과자 등을 생산하는 선홍식료공장에서 단기간에 리모델링을 완료한 데 대해 치하했으며, 평양시 광복거리 칠골동에 있는 중국요리 전문식당인 향만루 대중식당에 들러 "요리의 가짓수를 늘리고 질을 높여 인민들에게 맛 좋고 다양한 음식을 더 많이 먹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 당 정치국 위원인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겸직)와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태종수(당 비서)·문경덕(당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이 수행

- **北라선 인민위 간부 전격 교체(12/12, 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1월 특별시로 승격한 라선시의 인민위원회 간부들을 대거 교체한 것으로 전해짐
 - 대북소식통은 "최근 북한을 다녀온 중국인 사업가에게 라선시 김수열 인민위위원장이 경질됐고 채송학·최광훈 부위원장 등 3명의 부위원장도 지난 10일 자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올해 초부터 라선시당 책임비서를 맡아온 림경만 역시 교체설이 돌고 있다"고 밝힘.



● 김정일-다이빙궈 평화협정 논의 시사(12/12, 조선신보)

- 조선신보가 평양을 방문한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
- 이 신문은 12일 김 위원장과 다이빙궈의 면담 사실을 거론하면서 “조중(북중) 사이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조선은 올해 1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해 정식 제안했다”면서 “내년 1월에는 후진타오 (중국)주석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어,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이 조선반도 현실이 제기한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6자회담이 중단된 조건에서 조선의 경수로 건설에 대해 미국이 우라니움(우라늄) 농축기술의 군사이용 가능성을 걸고드는 등 조미(북미) 사이에 새로운 현안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9.19 공동성명의 ‘평등과 호상 존중’ 정신을 되살리는 것과 정전체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무력충돌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담보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

■ 김정일동향

- 12/6 김정일,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12/6, 중통·중방)
 - 오수용(함경북도 당책), 김기남·홍석형(黨 정치국위원들), 김경희(黨 부장),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박도춘(黨비서), 현철해·리명수(국방총 국장) 등 동행
- 12/6 김정일, 함경북도예술단 공연 관람(12/6, 중통)
 - 오수용(함경북도 당책), 한흥표(함경북도 인민위원장), 김기남·홍석형(黨 정치국위원들), 김경희(黨 부장),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박도춘(黨비서) 외에 현철해·리명수(국방총 국장) 등 동행
- 12/7 김정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 지원 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12/9, 중방)
- 12/7 김정일, 평양시의 평양양말공장, 위생공장 분공장 등 경공업 공장과 새로 건설된 보통강백화점을 시찰(12/10, 중통)
 - 김경희(黨 부장),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문경덕(黨 비서) 등 동행
- 12/9 김정일, 中 국무위원 ‘다이빙궈’(戴秉國)와 회견(12/9, 중통·중방)
 - 대병국은 석상에서 ‘호금도’의 인사와 자신이 준비한 선물 전달 및 朝·中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 발전과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담화 진행
 - 류홍재(駐北 中 대사), 장지군(中 외교부 부부장), 애평(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구원평(中 중앙외사관공실 주임), 무대위(中 조선반도문제 특별대표), 강석주(내각부총리), 김양건(黨 비서) 등 참가



- 12/9 김정일, 평양경공업공장 시찰(12/11, 중통)
- 당 정치국 위원인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겸직)와 정치국 후보 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태종수(당 비서)·문경덕(당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이 수행

■ 김정은동향

- 12/7 김정은, 평양시의 평양양말공장, 위생공장 분공장 등 경공업 공장과 새로 건설된 보통강백화점을 시찰(12/11, 중통)
- 12/ 9 김정은, 평양경공업공장 시찰(12/11,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北, “2010년은 선군조선의 위력이 과시된 뜻깊은 한 해”라며 △黨 대표자회와 黨창건 65돌 열병식 성과적 개최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주체철 생산체계 확립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의 비료공업 주체화 △각지 발전소 건설 및 기계공업의 CNC화 선전(12/6, 중통)
- 경공업의 발전은 “우리(北) 생활의 전변, 강성대국 건설의 성과”라며 김정일의 경공업분야 ‘현대화 등 지대한 관심과 현지도’ 강조 및 경공업발전에 쏠린 분발실천 촉구(12/4, 노동신문 정론·12/7, 중방)

나. 경제

● 北신문, 경제부문 ‘주체화, CNC화’ 촉구(12/8, 노동신문)

- 신문이 이날 ‘주체철’을 생산하는 함경북도 청진시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이하 김책제철)를 본받아 경제 부문의 ‘주체화’와 ‘CNC(컴퓨터수치제어)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
- 이어 ‘김철(김책제철의 북한식 약칭)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에 화답하여 더 빨리 내달리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을 통해 “(김책제철의 성과는) 우리 경제 주체화의 승리를 선언하는 포성이며, 주체화는 김일성 동지의 유훈이자 우리 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라면서 “주체화의 포성이 높이 울려야 경제강국의 대통령이 환히 열린다”고 주장
- 또한 “김철의 포성은 우리 경제의 현대화, CNC화가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선언하는 새로운 진격의 포성”이라면서 “전체 당원과 근로자들은 김철의 노동계급처럼 현대화와 CNC화의 포성을 더욱 세차게 울려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대변혁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함.



● 北, 자립경제로 강성대국 열 것(12/9, 조선신보)

- 신보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관건적 고리는 경제부흥과 인민생활의 향상이고, 그 담보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있다”면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교류·협력도 중요한 요소지만 주안은 경제의 자립성 강화에 있다”고 밝힘.
- 이어 “어떤 국제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원과 기술로 자립경제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조선(북한)이 추진하는 경제부흥전략의 핵심”이라면서 “‘대문’을 여는 시점도 적대국의 제재나 6자회담 유무 등 대외적 환경의 변화 추이에 연계돼 있지 않다”고 주장
-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른바 ‘주체철’을 생산하는 함경북도 청진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시찰한 사실(중앙통신 12월6일 보도)을 인용, “그동안 다져 온 자립경제를 토대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다는 것이 영도자의 현지도도를 통해 확인된 조선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하였으며 “경제적 자립성 강화의 결실로 올해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고, 국내에 풍부한 우라늄을 이용하는 핵동력 공업의 완비계획도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임.

■ 기타 (대내 경제)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일꾼·노동자·기술자들, 12월초 현재 지난해 대비 선철 2.5배, 강철 4.2배, 압연강재 6.7배 증산(12/8, 중통)
- 당이 제시한 ‘최첨단 돌파정신’을 담보로 “사회경제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강성대국 건설을 실현하자”며 ‘최첨단 총력투쟁’ 선동(12/9, 중통·노동신문)
- ‘선군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친(김정일 당총비서 재추대, 대계도간석지 전변 등) 역사의 한 해였다’며 “군대와 인민은 김정일의 선군영도를 받들어 새해에도 강성대국의 최후 승리를 향해 총돌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12/9, 평방)
- 개건된 ‘평양밀가루가공공장 준공식’, 12/9 최영림(내각총리)·문경덕(평양시 당책)·조영철(식료일용공업상)·양만길(평양시인민위원장) 등 참가下 진행(12/9, 중통)

다. 군사

● 北, 백령도 동북방에 포사격…“통상훈련”(12/8, 연합뉴스)

- 북한군이 8일 오전 9시 4분께 서해 백령도 동북방 북측 해역으로 포사격을 가했으며 오후에도 북측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나는 포성이 청취된 것으로 확인됨.
- 남한 군 관계자는 이날 “어제부터 북측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포성이 들렸다”면서 “오늘은 백령도 동북방 북측 해역으로 포사격을 한 것



- 이 레이더에 관측됐다”고 밝힘.
- 그는 이어 “포탄의 탄착 지점을 분석하고 있지만 북방한계선(NLL) 이북의 북측 해역”이라며 “이번 포 사격을 통상적인 훈련으로 추정되지만 그 의도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함.
 - 이에 합참 관계자는 “백령도 동북방 북측해역에 수발의 포탄이 탄착돼 확인 중”이라며 “남측에선 포성도 청취되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로 북한 해안에 가까운 지점”이라고 설명
 - 군 소식통은 “오후에도 북측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들리는 포성을 백령도 주민들이 청취한 것으로 안다”고 전함.

라. 사회·문화

● 남한드라마 시청 北주민 1천200명 수감(12/6, NK지식연대)

- 북한이 불법 외국 드라마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몰래 시청하다 적발돼 수감된 북한 주민이 1천명이 넘는 것으로 보도
- 단체는 평안남도 개천시 소재 개천 교화소(한국의 교도소에 해당)에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돼 수감된 북한 주민이 1천2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밝힘.
- 북한은 외국 대중문화 유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지만 중국을 통한 복제 DVD와 음악 CD 유입이 늘면서 남한 대중문화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이 단체는 설명
- 단체는 “개천교화소가 생긴 이래 한국 드라마 건으로 잡혀온 사람이 1천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교화소가 이들로 인해 인원이 초과될 지경이라고 개천교화소 관계자가 전했다”고 전함.
- 이들은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더 혹독한 처우를 받으며 2~5년간 복역하는 것으로 알려짐.
- 단체는 또 북한이 지난 1월 ‘씩은 정신’을 가진 이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130 상무’라는 특별팀을 조직했다고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함.

● 연평도 포격 진상 아는 北주민 10% 이하(12/6, 연합뉴스)

- 북한개혁방송,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등 4개 대북방송매체는 6일 오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먼저 연평도에 포격했다는 사실을 아는 북한 주민은 많아야 10%”라고 밝힘.
- 이들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북한의 연평도 포격 규탄과 민간 대북방송 활성화를 위한 민간 대북방송 4사(社) 공동 기자회견’에서 “여러 대북 매체들이 내부 통신원의 전언을 종합해 본 결과,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조선중앙방송(대내용 라디오방송)이나 제3방송(각 가정에 스피커로 전달되는 일종의 유선방송망) 등 내부 선전용 매체의 보도를 통해 연평도 포격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북한이 먼저



포를 쏘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은 10% 이하”라면서 지난달 30일 열린 북한방송이 량강도 혜산시의 주민과 나눈 통화내용을 공개함.

- 이 녹취에서 혜산시 주민은 연평도 포격과 관련, “남조선이 먼저 쏘다고 생각한다”면서 “나 뿐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함.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당국의 통제로 선전·선동 목적의 내부 방송만 접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사건의 진상을 알기는 어렵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대북방송을 보다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함.
- 이들 매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 간부와 주민에게 북한정권의 본질을 알려주고 개혁 개방과 평화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외에도 민간 대북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원을 호소함.

● 연평도 포격 후 평양은 ‘평온’(12/7, 환구시보)

- “계속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는데 별 느낌이 있겠습니까?” 최근 서해에서 실시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한 지방정부 관계자가 사석에서 담담한 어조로 한 말임.
- 신문은 이날 평양발 르포 기사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과 뒤이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졌지만 정작 북한에서는 평온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함.
- 환구시보는 서해에서의 긴장 상황과 달리 평양의 텔레비전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함경도 현지지도 동향이 주로 보도되고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마오안잉(毛岸英)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가 반복 방영되는 등 긴장된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
- 한국은 중요 지역이 북한군의 장사정보 사정권에 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긴장 속에서도 평양을 비우고 함경도 지역 현지지도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
- 신문은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집중적으로 현지지도하고 있는 함경남·북도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중심지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특히 라선특별시는 도로망이 대폭 확장된 가운데 어디서나 지린성 번호판을 단 중국 트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북·중 경협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라고 전함.
- 아울러 북한은 미국이 핵 프로그램의 확산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대상으로는 무력 도발을 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과시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함.

● 개성공단 제품, 북한 장마당서 팔려(12/7, 자유아시아방송(RFA))

-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남한 기업 제품이 북한 내 ‘장마당’에서 공공연히 팔리고 있다고 RFA가 이날 보도



- 개성공단 물건으로 장사를 한다는 황해북도 주민 임모씨는 이 방송에 “개성시는 물론이고 개성과 가까운 황해남·북도의 대도시 장마당과 상점에 가면 개성공단 물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면서 “북한 상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누구나 품질을 보고 개성공단 물건인 줄 안다”고 말함.
 - 그는 이어 “내 경우도 아내와 함께 장마당에서 개성공단 물건을 팔고 있는데 돈벌이가 괜찮다”면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주민들은 월급을 다 못받아도 물건을 빼어내 팔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고 덧붙임.
 - 북한과 의류 임가공 사업을 해 왔다는 남한의 사업가는 “북한에서 임가공 사업을 하면 생산품 중 최소 10%는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북한 사람들의 제품 빼돌리기가 개성공단 업체라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함.
 - 무역 일로 북한에 자주 간다는 조선족 박모씨는 “북한의 장마당에서 개성공단 물건이 공공연히 거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두 불법유출된 물건은 아닐 것”이라면서 “남한 입주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선물로 지급했을 수도 있고, 북한측 공단 간부들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아낸 물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 중국 국적 조선족 정모씨는 “지난 9월 단체로 개성관광을 다녀왔는데 세련된 옷차림의 여성을 보고 다들 놀랐다”면서 “옷과 구두가 너무 좋게 보이자, 함께 간 사람들이 개성공단 물건일 거라고 말했다”고 RFA에 말함.
- **北방송, “황북 장풍군서 고려 13대-18대 왕릉 발굴”(12/7, 평양방송)**
- 북한의 개성고려박물관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최근 황해북도 장풍군의 고분군을 공동 답사해, 고려 13대 선종(1049~1094년)과 18대 의종(1127~1173년) 왕릉을 찾아냈다고 방송이 이날 전함.
 - 이 방송은 “(이들 기관) 학자들이 고려사, 중경지(中京誌) 등의 고문헌을 토대로 고분군 현지를 답사하고, 무덤 내 구조물 짜임새와 판석·판돌 규모, 출토된 유물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과학적으로 고증했다”고 밝힘.
 - 이 방송에 따르면 새로 발견된 두 왕릉은 황해북도 장풍군 고읍리 ‘리 소재지’ 서방 4km의 산기슭에 서로 1km 정도 떨어져 자리잡고 있음.
 - 선종 왕릉인 ‘인릉’의 경우 봉분 둘레에 돌난간, 석조 동물상, 망주석, 제당터 등이 장식돼 있고, 묘실은 3.44m×2.18m×2.16m(길이-너비-높이 순), 관대(棺臺.관을 얹는 평상)는 2.8m×1.4m×0.16m(길이-너비-두께 순)이며, 의종 왕릉인 ‘희릉’의 경우 묘실은 3.7m×2.97m×2.4~2.6m, 관대는 1.8m×1.03m×0.25m 크기임.
 - 평양방송은 “인릉에서 특이한 점은 관대의 너비가 1.4m로 다른 왕릉보다 훨씬 길다는 것인데, 이는 인릉이 부부 합장묘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고려 선종의 정비는 14대 현종의 친모인 시숙왕후(思肅王后)



- 이씨임.
- 그러나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이상준 소장은 “북한의 고읍리 고분군은 매우 광대하고 무덤도 많아, 명문이 새겨진 묘지석이나 옥책이 발굴되지 않는 한 새로 발견된 왕릉이 과연 인릉과 희릉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함.
 - 한편 평양방송은 고려 왕릉 2기와 별도로, 개성시 상도리에서 고려 문종 때 세워진 대사찰 흥왕사(興王寺) 터를 발견했으며, 32만㎡에 달하는 절터에서 주춧돌, 석탑자리, 전(塼, 바닥에 깐 벽돌), 기와, 도자기 등이 나왔다고 전함.
- 北, 주민 경제동원에 ‘긴장감’ 활용(12/7,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이 자신들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말미암은 군사적 긴장감을 주민들의 경제동원에까지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해주뜨락뜨르부속품공장의 증산 소식을 전하면서 ‘모두 다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자!’는 구호를 소개하고 “우리의 조국강토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 호전광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노동자들이 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고 밝힘.
 - 이 방송은 “공장의 일꾼들은 전시생산을 보장하던 정신으로 지난 시기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웠다”고 말함.
 - 평양방송도 이날 황해북도 수안군의 내년 농사준비 소식을 소개하면서 “미제와 남조선 호전광들이 평화로운 이 땅에 새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협동농장에서 다음해 농사 차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힘.
 - 또 강동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증산 소식을 전하면서 “전쟁의 불구름을 훔쳐 보낼 배짱을 지니고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임.
- 北마약사범 급증…“학생이 밀매 증개”(12/8, 좋은벗들)
- 북한 당국의 대대적 단속에도 마약사범이 오히려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 전함.
 - 이 단체의 온라인 소식지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 함경북도 지부는 지난 9월 초순 청진시와 무산시에서 마약 제조·밀매단을 단속, 마약 3kg을 압수한 것을 비롯해 9~10월 두 달 동안에만 마약밀매단 3개 조직을 적발했다고 함.
 - 하지만 북한 내 마약사범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마약도시’로 악명 높은 함흥시의 경우 마약중독으로 시립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수가 2007년 월 40~50명에서 2008년 월 50~60명, 2009년 월 80~90명, 올해 월 100명 전후로 급증함.
 - 함경북도 함흥시의 ‘보안 일꾼(기관원)’은 “의약품이 부족하다 보니 마약을 일종의 치료제로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10년 넘은 두



통도 ‘얼음’(마약의 일종)을 먹었더니 개운해졌다는 식의 소문을 타고 마약이 일종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라고 말함.

- 이 기관원은 또 “마약 밀매는 모험을 감수하는 만큼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서 “마약사범들이 지방당 간부와 보위부원 등의 비호를 받고 있어 단속 그물망에 잘 걸리지 않고, 잡히더라도 대체로 돈을 주고 빠져나올 수 있다”고 밝힘.

● 北통신, “인민 ‘멸적의지’ 고조”…사상교육 강화?(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이후 평양 소재 사상교육장인 ‘중앙계급교양관’에 많은 주민과 군인들이 찾아가 유사시 ‘멸적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통신이 이날 보도
- 이 통신은 “연평도 포격전 이후 중앙계급교양관에 인민군 군인, 각 계 근로자, 청소년 학생 등 참관자가 크게 늘었다”면서 “이들은 남조선 괴뢰패당이 외세를 업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경우 조국 수호전에 떨쳐나가 침략자들을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고 주장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연평도사건에 대한 인민들의 반향과 분위기를 국내(북한) 언론이 전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함.
- 통신은 “이곳에서 참관자들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벌어진 미제의 도발들, 전쟁 때 세균전 만행, 남조선 통치배들의 죄행 등을 폭로하는 녹화편집물과 증거자료를 보고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 올해 들어 현재까지 참관 인원이 32만8천명을 넘겼다”고 말함.

● “토끼풀 먹어요” 北꽃제비 여성 끝내 아사(12/10, 데일리NK)

- 뼈만 남은 처참한 몰골로 자신이 먹을 토끼풀을 뜯는 영상이 국내외 TV로 방송돼 충격을 줬던 북한의 20대 ‘꽃제비’(‘떠돌이’란 뜻의 북한 속어) 여성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끝내 숨졌다고 매체가 이날 보도
- 이 영상을 촬영한 일본 아시아프레스 관계자는 매체에 “이 여성을 취재한 우리 회사의 북한 내부 조직원에 따르면 가정도 없이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던 이 여성이 10월 22일께 옥수수밭에서 숨진채 발견됐다고 한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이어 “옥수수 수확철을 맞아 옥수수를 따먹으러 갔다가 굶어죽은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인민보안소(경찰서)가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처리를 늦게 해 시신이 오랫동안 옥수수밭에 방치됐다고 들었다”고 덧붙임.
- 공개된 영상에서 이 여성은 “토끼풀을 뜯어서 뭐하냐”는 질문에 “내가 먹으려고 한다.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죽었고, 집도 없어 바깥에서 잔다”고 답해,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줌.



- 이 영상은 지난 10월 KBS의 기획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방송됐고, 그 후 영국 BBC방송과 일본 아사히TV에서도 전파를 탐.

● **北, 연평도 진실 담은 DVD 집중 단속(12/10, 자유아시아방송(RFA); 북한개혁방송)**

- 북한 당국이 탈북자 단체에서 만든 연평도 포격에 대한 진실을 담은 DVD의 반입을 막기 위해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 이 방송은 탈북자 단체 관계자를 인용, “이달 초 신의주시 남중동에서 외국영화 DVD를 보던 20대 청년들이 보위부에 단속됐다”면서 “이들은 외국영화를 보려다가 (영화 시작에 앞서 삽입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관련 내용을 봤기 때문에 엄중히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함.
-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 직후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국경 일대에 내려와 외국에서 제작한 DVD 복제품을 회수해 내용물을 검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신의주와 함경북도 국경지역을 통해 몰래 반입되는 외국영화 녹화물과 개인이 제조한 DVD 복제품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함.
- 국방위 검열단은 북한 영화들을 담은 DVD 복제품 가운데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다룬 내용이 섞여 있다고 보고 검열을 하고 있다고 RFA는 덧붙였다.
- RFA는 이어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 드라마 등 외국문물을 통제하는 기관은 ‘109상무’였지만 최근 국방위로 단속 주체가 바뀌었다”면서 “외국영화 DVD를 즐겨 보는 계층이 노동당과 군인 등 권력층으로 확대되면서 북한 당국이 이런 특수 기관원들의 집을 수색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검열단을 조직했다”고 말함.

● **北, ‘천안함사건’ DVD 유입에 비상(12/10,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천안함 사건 등의 진실을 담은 DVD가 북한 내에 나돌아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대폭 강화됐다고 RFA가 이날 전함.
- 이 방송은 탈북자단체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 “이달 초 신의주시 남중동에서 외국영화 DVD를 보던 20대 청년들이 보위부에 적발됐다”면서 “이들은 외국영화와 함께 DVD에 편집된 천안함 사건 등의 진상을 봤다는 이유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 같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 직후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국경 지역에 내려와 외국산 DVD 복제품 내용을 검사하고 있다”면서 “신의주와 함경북도 국경을 통해 밀반입되는 외국영화 녹화물과 개인이 제조한 DVD 복제품이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말함.
- 국방위 검열단은 북한영화를 담은 DVD 복제품에도 천안함 사건 등에 관한 내용이 섞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RFA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 드라마 등 외국 영상물은 ‘109상무’에서 주로 단속했는데 최근 들어 국방위가 전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 “당과 군 간부 등 권력층까지 외국영화 DVD가 확산되자 검열단의 권한을 더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
 - 한국의 일부 탈북자단체들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의 진실을 담은 DVD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내고 있다고 RFA는 소개
- “**李대통령 연설도 봤다**”…北에 남한TV 영상물 퍼져(12/10, 연합뉴스)
- TV드라마 DVD 등을 통해 남한의 패션 트렌드, 헤어스타일 같은 일상적 생활문화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탈북자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약칭 ‘성통만사’)가 10일 ‘북한관 한류열풍,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공개한 탈북자증언 동영상은 북한의 이런 변화를 극명히 보여줌.
 - 이 동영상에서 작년 3월 양강도 혜산시에 살다가 탈북했다는 김은호(가명, 38)씨는 “황해남도 연안에서는 남한의 공중파 방송을 쉽게 시청할 수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연설도 생중계로 봤다고 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99%는 한국 드라마를 적어도 한 두 번씩 봤을 것”이라고 밝힘.
 - 지난해 8월 탈북한 신의주 출신의 이성일(가명, 23)씨는 “드라마 속의 남한과 내가 사는 곳이 너무 달라 호기심이 일었고 남한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젊은층의 경우 머리 모양만 보면 한국 드라마를 봤는지 알 수 있는데 (당국이) 사회주의식 머리모양을 해야 한다고 아무리 교육해도 별효과가 없다”고 전함.
 - 작년 3월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탈북했다는 김영철(가명, 24)씨는 “특히 ‘가을동화’, ‘천국의 계단’ 같은 드라마의 인기가 높았다”면서 “처음에 처벌을 두려워하시던 부모님도 나중엔 드라마를 구해오면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말함.
 - 김씨는 이어 “언젠가 주변 친구들이 동네주민의 신고로 적발된 적이 있는데 2명만 노동단련대에 끌려가고 나머지 2명은 돈을 줬는지 풀려났다”면서 “보위부원이나 법관들도 뒤에서는 다 (남한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덧붙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黨창건 65돌 경축 ‘전국체육축전 겨울철 체육종목경기’, 평양 빙상관에서 진행(12/6, 중통)
- 北, 무용예술교육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용표기법’(한글의 자모를 결합하여 춤동작으로 표기) 소개(12/6, 중통)



- 訪北 총련 새세대일꾼 대표단(‘김일룡’ 재일본조선청년동맹 부위원장), 12/7 비전향장기수 ‘리공순’과 상봉(12/7, 중방)
- 평양출판사, 최근 圖書 《선군-사랑의 정치》발간(12/8, 중통)
- 訪北 중국 TV연속극 ‘모안영’제작단, 김정일에게 연속극 ‘모안영’ 선물(12/9, 중방)
- 北, 가극 ‘홍루몽’ 再창조사업과 교예작품창작에 공로있는 창작가·예술인·일꾼들에게 표창 수여(12/9, 중통)
- 北 문학예술분야에서 올해 이룩된 성과(△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및 ‘은하수 10월 음악회’ △경희극 ‘산울림’, 가극 ‘양산백과 축영대’와 ‘예브게니오네긴’ 완성 등) 선전(12/9,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박의춘 외무상 다음 주 러시아 방문(12/10, 연합뉴스)

-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이은 한반도 긴장상황 논의를 위해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러 외무부가 9일 밝혔다.
- 러 외무부는 이날 내놓은 언론 발표문에서 “다음 주에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위성락 한국 외무부 차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며, 같은 기간에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러 외무부 특임대사(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러 외무부는 “한반도 긴장상황 해결을 위해 외무부가 관계국 파트너들과 집중적 논의를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은 적극적 대화는 이 지역(한반도)에서의 대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황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러 외무부의 발표는 북핵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한반도 사태 논의를 위해 이날 러시아를 방문한 가운데 나옴.
- 외무부는 발표문에서 ‘지난달 29일과 30일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르다브킨 외무부 차관이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 위성락 한국 외교통상부 차관(본부장)과 전화 통화를 했고, 로그비노프 특임대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서울을 방문했다’며 한반도 사태 중재를 위한 러시아 측의 적극적 외교 행보를 강조
- 발표문은 이어 “오늘은 모스크바에서 보르다브킨 차관과 사이키 일 외무성 국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덧붙임.
- 북한 박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연평도 사태 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응 과정에서 중간자적 입장을 지키고 있는 러시아의 지원을 확



가장 중요한 국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 **北, 中서 이례적 관광객 유치 설명회(12/11, 연합뉴스)**

-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국에 홍보단을 파견, 관광자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11일 랴오닝성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평안북도 관광국 대표단이 지난 6일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 단둥과 다롄, 선양 등을 순회하며 관광자원 설명회를 잇달아 열고 있음.
- 최정호 국장은 단둥, 다롄시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간 관광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해 쌍방의 관광산업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北, 中·러와 백두산호랑이 보호 협약(12/11, 길림일보)**

- 북한이 멸종 위기에 처한 백두산 호랑이 보호를 위해 중국, 러시아와 협약을 체결
- 신문은 지린(吉林)성 동식물보호처를 인용,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이 최근 야생 백두산 호랑이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야생 호랑이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생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밝힘.
- 시베리아 호랑이라고도 불리는 백두산 호랑이는 북·중·러 3국 접경 지역에 서식하는 20여 마리를 포함해 전 세계 야생에 500여 마리만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기타 (대외 일반)**

- 美國의 반테러전은 “세계 주요자원 지대와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군사적 장악과 통제를 강화해 세계적 지배권을 확장하려는 침략 수법”이라고 비난(12/6, 중통·노동신문)
- 北,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對北 제재책동 강화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의도적·계획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며 무력으로 사회주의 제도를 말살하려 덤벼든다면 천백배로 보복타격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12/6, 평방)
- 美 ‘2010년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표(北·中·이란 등 8개국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 관련 “종교문제를 걸고들며 부당한 내정간섭과 압력행위를 일삼는 범죄행위”라고 嘲笑(12/6, 평방·노동신문)
- 독일 정부의 2차 세계대전시 감행한 범죄행위 인정과 지속적인 보상단행과 달리 일본의 ‘과거범죄 왜곡과 정당화, 군국주의 회귀행태’ 비난 및 과거청산 태도변화 촉구(12/7, 중통·민주조선)
- 미국이 최근 진행한 ‘임계전핵시험’을 지적하며 “미국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은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핵야망을 은폐하



- 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고 持續 선동(12/7, 노동신문)
- 일본의 韓國戰 당시 '北지형 전략지도 작성, 미군제공'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 일본이 또 다시 "제2 조선전쟁에 가담時 과거 戰犯罪 포함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적개심 표출(12/8, 중통·노동신문)
- 美 게이츠 국방장관의 '美軍의 이라크 계속주둔 가능' 발언을 "이라크 장기강점을 합법화하려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기만적인 세계제패야망 철회" 촉구(12/9, 중방·노동신문)

나. 6자회담(북핵)

● 北외무상, "핵억지력 강화 계속할 것"(12/10, 인테르팍스통신)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맞서 핵 억지력 강화 기초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힘.
- 박 외무상은 이날 12~15일로 예정된 모스크바 방문에 앞서 평양에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 단독으로 한 인터뷰에서 "한반도 상황이 첨예화된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도 우리는 주권과 평등,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기초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
-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화 재개를 원치 않고 있으며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우리의 제안에 침묵하면서 북조선에 대한 고립과 압사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
- 박 외상은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남한의 적대적 행동에 맞서 핵 억지력에 기초한 방어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그는 "미국과 남한이 북조선에 대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선군 정책을 향한 우리의 선택과 핵 억지력에 기초한 다각적 자위력 강화가 옳았음을 다시 한 번 확신한다"고 밝힘.
- 박 외상은 이어 "최근 한반도 상황은 아주 위험한 단계에 놓여 있으며 남북 관계는 유례 없이 악화됐다"며 "이 모든 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안보와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 그는 "상황 악화의 주된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현 남한 정권의 대결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북조선을 핵 선제공격 대상 목록에 포함시켜 놓고, 북조선에 대한 고립과 압사 정책을 쓰고 있으며, 남한의 지배 보수층은 외부 세력에 의존해 이전에 남북 간에 합의된 모든 협정을 부정하고 북조선과의 대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공격함.
-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박 외상은 "이 사건은 남한 호전 세력의 전쟁 책동을 위한 비이성적이고 계획된 조치"라며 "이들은



우리의 신경을 건드려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고 이를 빌미로 새로운 전쟁 도발의 기회를 엿보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

- 박 외상은 12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를 방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 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의제에 대해 “양자 관계와 가장 중요한 국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3. 대남정세

● 北, ‘연평도포격 책임’ 또 남측에 전가(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또 남측에 떠넘김.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서기국 상보’를 통해 “연평도 포격사건은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에 의해 면밀히 꾸며지고 의도적으로 감행된 또 하나의 엄중한 반공화국(반북) 군사도발”이라고 주장
- 조평통은 또 남측의 민간인 인명피해에 대해 “괴뢰패당은 몇 km도 안 되는 섬에 군사시설과 민간인 마을을 섞어놓고 군기지 안에 민간인들을 끌어들이어 우리의 대응타격을 피해보려 했다”면서 “민간인피해”에 대해 떠드는 것은 도발자의 정체를 가리기 위한 억지궤변에 불과하다”고 말함.
- 조평통은 이어 “남조선 보수패당이 연평도 포격사건의 직접적 도발자라면 뒤에서 추동한 조종자는 미국이며, ‘북방한계선’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미국이 만들어 놓은 도화선”이라면서 “연평도 포격사건은 북남 간 무력분쟁과 참여한 정세를 타개할 유일한 출로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이라는 것을 교훈으로 새겨 주고 있다”고 강변
- 북한은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당일부터, 인민군최고사령부 보도(11.23), 외무성대변인 담화(11.23), 조평통대변인 성명(11.26), 조선중앙통신사 논평(11.27) 등을 통해 우리(남) 측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함.

● 北, 인터넷 체제선전 강화…‘남남갈등’ 정조준?(12/9, 연합뉴스)

- 북한이 인터넷을 이용한 체제선전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인상임.
- 지난 10월10일 당창건 65주년 기념일에 맞춰 개설된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가 종전의 영어, 스페인 외에 ‘조선말’(국어) 기사서비스를 최근 시작함.
- 며칠 하다 말았지만 지난달 하순에는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댓글마다 자기들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의 ‘답글’을 달기도 함.
-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국문 기사를 신속히 올리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가파르게 선전 수위를 높여갈 분위기임.



- 지난 10월 자체 홈페이지를 열기 전까지 중앙통신은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계열 '조선통신사' 홈페이지의 '조선중앙통신' 코너를 통해 하루 늦은 기사를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함.
- 하지만 새로 시작한 중앙통신 홈페이지를 통한 국문기사 서비스는 경우에 따라 국내 네티즌이 중앙통신 기사를 바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음.

● 北, 남측 단체에 '연평도 문건' 보내와(12/9, 연합뉴스)

- 북한이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내용의 문건을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종교 단체에 팩스로 보낸 것으로 이날 파악됨.
- 통일부 관계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각각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으로부터 지난 7일과 8일 연평도 포격사건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내용의 문건을 팩스로 받았다고 오늘 신고했다"고 밝힘.
- 북측은 이 문건에서 '군사훈련 등 남측의 도발로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고, 남측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해 남북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함.
- 북측은 또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남측에서) 힘차게 벌려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에 대해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 北, "전면전도 준비돼"…한·미 합참의장협의회 비난(12/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 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의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 정세는 전면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교전확대든 전면전이든 다 준비돼 있다"고 위협했다고 통신은 전함.
- 담화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계획을 전면적으로 보완키로 합의하고 미국측이 우리군의 자위권 행사 지침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8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에 대해 "우리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전쟁모의로 사실상 교전확대를 통해 전면전을 일으키려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
- 이어 "괴뢰군이 비행대와 함선, 미사일까지 총동원하여 우리에게 불질을 해대고 미제가 최신 전쟁장비들을 동원해 개입해 나서게 되면 그것이 국지전에 국한되지 않고 전면전쟁으로 확대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함.
- 또 "이 땅에서 전면전이 다시 터지면 결코 조선반도의 범위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도발자, 침략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징벌로 그 아성을 송두리째 짓밟고 버리고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영예롭게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임.



■ 기타 (대남)

- 대통령 및 통일부장관의 對北발언(책임있는 태도표시가 남북관계의 출발점, 北의 태도변화)관련 “핵문제 등을 거두고 있는 것은 대결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닌 동족대결을 야기시키는 불씨로 되고 있다”며 “반통일적 태도부터 달라질 것”을 주장(12/6, 노동신문)
- ‘北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를 우리 정부의 “對北정책이 낳은 동족대결후과”라며 사후대책과 관련, “北·中·美 3자간 협상의 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北 代辯(12/7, 조선신보)
 - 서해 포격전으로 촉발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외교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조선반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국면이 열릴 수 있을 것임.
- 우리(남) 정부의 北 찬양 노동자 구속, 「실천연대」 압수수색 등을 “연북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적 단체들에 대한 탄압책동”으로 비난하며 “보안법 철폐” 촉구(12/7, 중방)
- 北 ‘조평통’ 서기국 ‘상보’(12.8字), ‘北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를 “南 군사훈련과 對北정책 산물, 미국추동 등 韓美의 군사적도발”이라고 책임회피 선동(12/9, 중통·중방)
- ‘한미FTA’ 재협상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野黨의 반대 성명·집회 발언 등 상세히 전하며 “각계층의 치솟는 항의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再次선동(12/8, 노동신문)
- 韓·美 원자력협정 개정협상(10월말~ ,워싱턴) 관련 “南 당국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핵무기 개발을 공공연히 마음대로 다그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12/9, 중방)
- 北, “최근 부정부패사건(민간인 불법사찰, 청목회 사건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싸움으로 南 정국이 매우 소란하다”며 이로 인한 ‘집권세력에 대한 반정부투쟁이 과감히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12/9, 민주조선)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6자 긴급협의 中 제안에 전향적”(12/12)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동 제안에 대해 “당사국들이 모두 나오면 응할 수 있다”며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북·중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지난 9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면담에서 ‘당사국들이 다 나오면 6자 수석대표 긴급회동 제안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의 입장이 전향적이라고 하더라도 한·미·일이 반대하는 현시점에서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입장이 (한·미·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헤커 “北에 HEU 생산 비밀시설 있을 것”(12/11)

- 북한이 지난달 공개한 영변 우라늄농축 시설과는 별개로 북한 내 어딘가에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이 가능한 유사 비밀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그프리트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소장은 10일 격월간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달 동료 학자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해 영변의 우라늄농축 시설을 둘러본 경험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 헤커 소장은 자신들이 목격한 원심분리 시설은 핵폭탄 제조용이 아니라 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수로를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그 이유로 “중전에 사찰을 받았던 장소에 (무기제조를 위한) 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외국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헤커 소장은 “따라서 북한의 다른 지역에 HEU 생산이 가능한 유사한 비밀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 또 헤커 소장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외교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미 2008년말 미국의 정권교체가 당시 주도면밀하게 짜놓은 계획에 맞춰 이번에 외부에 우라늄농축 시설을 공개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 이어 그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무기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상으로 걱정스러운 일은 분열성 물질, 혹은 분열성 물질 생산에



필요한 원심분리 기술 등의 수단을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게 되는 점이라고 지적했음.

- 그는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물론, 경수로 프로그램과 원심분리 시설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면서 “플루토늄 프로그램의 폐기는 가시권 내에 있지만, 우리나라 프로그램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음.
- 헤커 박사는 “미국은 이제 핵문제를 포함하되, 이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방향으로 동북아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재점검할 때가 왔다”며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돼야 하겠지만 이를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미국은 ‘쓰리 노, 원 예스(Three No’s, One Yes)’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만 한다”고 제안했음.
- 헤커 박사는 ‘쓰리 노, 원 예스’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더 이상 핵폭탄을 제조하지 않고, 핵폭탄을 개량하지도 않으며, 이를 수출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지난 2000년 10월 미·북 공동 코뮈니케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日, 6자회담 수석대표 바꾸기로(12/11)

- 일본이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를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지구문제 담당 대사(심의관)로 바꿀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11일 일제히 보도했음.
- 스기야마 심의관은 2000년 4월부터 2004년 8월까지 4년 넘게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로 근무한 ‘지한파’ 외교관으로 꼽힘. 이후 이집트 차석대사와 지구규모 과제 심의관 등을 거쳤음. 전임 사이키 국장은 외국 대사로 발령날 것으로 알려졌다.
- 사이키 국장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시절인 2008년 1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외무성 사무차관의 후임으로 아시아·대양주 국장에 취임했고, 이때부터 6자회담 대표로 활약했음. 대북 강경파라는 평가를 받았음.
- 마이니치신문은 “(6자회담 대표) 재임 기간이 3년 가까이 이르러 교체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北 외무상 “핵억지력 강화 계속할 것”(12/11)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10일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맞서 핵 억지력 강화 기초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박 외무상은 이날 12~15일로 예정된 모스크바 방문에 앞서 평양에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 단독으로 한 인터뷰에서 “한반도 상황이 첨예화된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도 우리는 주권과 평등,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초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화 재개를 원치 않고 있으며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우리의 제안에 침묵하면서 북조선에 대한 고



고 강조했다.

- 러시아 외교부 당국자는 다음 주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위성락 한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잇따라 만나 연평도 포격 사태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 위성락 내주 방러..‘북핵·연평도’ 협의(12/10)

- 북핵 6자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위 본부장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연평도 도발, 우리농축 프로그램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부 차관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양국은 위 본부장의 방러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오는 15일께 방문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위 본부장은 러시아 방문에서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명하고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러시아를 다녀온 뒤 16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방한하는 성 김 미국 6자회담 특사와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 또 위 본부장은 9일 주한 중국대사 대리인 싱하이밍(邢海明) 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연평도 포격사건,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 “박의춘 北 외무상 다음 주 러시아 방문”(12/9)

-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이은 한반도 긴장상황 논의를 위해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러 외무부가 9일 밝혔다. 러 외무부는 이날 내놓은 언론 발표문에서 “다음 주에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위성락 한국 외무부 차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며, 같은 기간에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러 외무부 특임대사(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러 외무부는 “한반도 긴장상황 해결을 위해 외무부가 관계국 파트너들과 집중적 논의를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은 적극적 대화는 이 지역(한반도)에서의 대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황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러 외무부의 발표는 북핵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한반도 사태 논의를 위해 이날 러시아를 방문한 가운데 나왔다. 외무부는 발표문에서 “지난달 29일과 30일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부 차관이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 위성락 한국



외교통상부 차관(본부장)과 전화 통화를 했고, 로그비노프 특임대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서울을 방문했다”며 한반도 사태 중재를 위한 러시아 측의 적극적 외교 행보를 강조했다.

- 발표문은 이어 “오늘은 모스크바에서 보르다브킨 차관과 사이키 일 외무성 국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 북한 박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연평도 사태 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응 과정에서 중간자적 입장을 지키고 있는 러시아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됨.

● 클린턴 “6자회담 앞서 北 도발 중단해야”(12/7)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중국 측이 내놓은 6자회담 제안에 대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6일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무장관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노선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3국 외무장관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중국과 북한의 강한 유대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해 도발적인 행동을 그만두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있어서 중국이 한·미·일 3국과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6자회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토대가 필요하며,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노력은 북한이 먼저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모든 행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시작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나. 미·북 관계

● 美 “北 인권상황 최악”(12/11)

- 미국은 10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최악이며,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포스너 국무부 민주·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가진 특별브리핑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최악”이라면서 “감옥에서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있고,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부족하다”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
- 그는 “우리는 이런 우려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공개적으로 계속 제기할 것”이라면서 “정말로 암울한(북한 내) 상황에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국무부의 로버트 킹 특사가 매일매일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 리처드슨 16-20일 방북..美국무부 “사적인 방문”(12/9)

-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해 점점 우려하고 있다”면서 방북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나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가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런 불안한 시기에 내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내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번 방문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방북시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 이번 방북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초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슨의 수석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인 한국계 토니 남궁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북한이 최근 미국 민간 전문가들을 잇따라 초청해 농축우라늄 시설과 경수로 건설 현장을 공개하는 등 자신들의 대외 입장을 알리는 카드로 적극 활용하는 상황에서 연평도 도발 이후 이뤄지는 이번 방북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됨.
-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리처드슨 주지사가 사적인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의 메시지를 갖고 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레브리핑에서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북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는 사적인 방북으로, 그는 미 정부의 어떤 메시지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크롤리 차관보는 다만 관례에 따라 미 정부가 최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리처드슨 방북 전 그와 접촉할 것이며, 방북 이후 리처드슨 주지사가 미 정부에 방북 결과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19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의 석방을 이끌어 냈고,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 상무장관에 지명되기도 했지만 특정기업과의 유착문제가 불거진 뒤 낙마했다.

● 美국방 “北도발은 아들 입지강화 노력 일환”(12/7)

- 로버츠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6일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아들(김정은)인 차기 지도자의 입지를 강화해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김정일이 아들로의 권력이양을 준비하는 승계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그는 아라비아해를 향해중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선상에서 천안함 사태와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연평도 포격 등은 “모두 아들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 같은 행동들은 북한 내 군부를 포함한 엘리트들에게 그가 권력을 가질 만큼 강하다는 메시지라고 게이츠 장관은 덧붙였다. 게이츠 장관은 따라서 “지금은 어렵고, 위험해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도발적인 행위로 모든 사람을 격양시킨 뒤 자발적으로 대화로 돌아오고 있으며, 우리는 똑같은 말을 두 번 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게이츠 장관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보다 안정시키고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조선신보, 김정일-다이빙궈 평화협정 논의 시사(12/12)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 기관지 조선신보가 평양을 방문한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됨.
- 이 신문은 12일 김 위원장과 다이빙궈의 면담 사실을 거론하면서 “조중(북중) 사이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조선은 올해 1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해 정식 제안했다”면서 “내년 1월에는 후진타오(중국)주석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어,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이 조선반도 현실이 제기한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신문은 또 “6자회담이 중단된 조건에서 조선의 경수로 건설에 대해 미국이 우라늄(우라늄) 농축기술의 군사이용 가능성을 걸고드는 등 조미(북미) 사이에 새로운 현안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9.19 공동성명의 ‘평등과 호상 존중’ 정신을 되살리는 것과 정전체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무력충돌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담보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 “中 ‘옥수수 주겠다’ 北 ‘쌀 달라’ 줄다리기”(12/12)

- 북한과 중국이 식량 지원을 두고 줄다리를 벌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5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했을 때 옥수수 50만t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재차 중국을 방문했을 때 쌀 50만t을 달라고 요구했고, 시기도 ‘내년 1월까지’로 못박았다는 것.
-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북한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 중국은 이전에도 쌀 수십만 t을 한꺼번에 북한에 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 <다이빙귀 ‘지각방북’ 왜?·“北 시간끌기 가능성”>(12/10)

- 중국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지각 방북’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음. 다이 국무위원이 연평도 포격 나흘 뒤인 27일 방한해 그 이튿날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할 때만 해도 그가 곧바로 북한에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음.
-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달 30일 ‘복수의 베이징 외교소식통’을 인용, 다이 국무위원이 12월 1일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그의 방북은 예측대로 즉각 이뤄지지 않았음.
- 다이 국무위원의 방북 시점을 놓고 관측이 무성하자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일련의 외교활동을 통해 유관국들과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외교적 접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당장 발표할 소식은 없다”고 선을 그었음.
- 다이 국무위원의 방북이 예상보다 늦어진 배경을 놓고, 뭔가 북중 양국 간 조율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됨. 다이 국무위원이 연평도 포격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도발적 행동’의 자제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임.
- 비슷한 맥락에서 연평도 포격 사흘 전인 지난달 20일 이후 2주 넘게 이어진 김 위원장의 숨가쁜 공개활동 행보를 다이빙귀의 방북 지연과 묶어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음. 실제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17일간 현지지도(시찰) 13차례, 공연관람 2차례, 기념촬영 1차례 등 모두 16차례(중앙통신 보도 기준)의 공개활동을 했음.
- 특히 다이 국무위원의 방북이 유력히 점쳐졌던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1주일 동안에는 ‘2일’만 빼고 매일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가 중앙통신에서 나왔음. 과거의 예를 봐도 김 위원장의 ‘지방 시찰’은 누군가 외국 고위인사를 만나기 거부할 때 종종 꺼내 드는 카드임. 실제로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의혹이 제기돼 2003년 1월 임동원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김대중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지만, 김 위원장은 지방 현지지도를 이유로 만나지 않았음.
-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서해에서 한미연합훈련(11.28~12.1)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다이빙귀 국무위원을 만나 어떤 진전된 메시지를 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지방 현지지도를 내세워 다이빙귀의 방북을 늦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음.

● 中언론, 다이빙귀-김정일 면담 크게 보도(12/10)

- 중국 언론매체들이 10일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면담 사실을 크게 보도했음.
- 관영 신화통신은 다이 국무위원이 8일 북한을 방문해 강석주 내각 부총리와 회담한데 이어 9일 김 위원장을 만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의 안부를 전했다고 썼음. 신화통신은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인터넷 사이트인 신화망에 CCTV의 다이빙귀-김정일 면담 보도 영상을 링크시키는 등 관련 뉴스가 눈에 띄도록 노력했음.

-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다이 국무위원과 회견했으며 양측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솔직하고 깊이있는 대화로 중요한 공동의 인식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중국 내의 여타 언론매체들도 신화통신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다이빙귀-김정일 접견을 비중있게 보도했음.
- 이런 가운데 상당수 중국 매체들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9일 '서기국 상보'를 통해 연평도 포격사건은 미국과 한국에 의해 면밀히 꾸며지고 의도적으로 감행된 반북(反北) 군사도발이라고 주장했다고 가감없이 전해 눈길을 끌었음.
-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도 먼저 북한 쪽의 영해에서 남한이 수천발의 포탄을 쏘으며 연평 포격사건은 남한의 고의적 도발이라는 게 북한의 주장이라고 소개했다. 일부 신문은 “연평도 사건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조평통의 주장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기도 했음.
- 중국 언론의 이런 태도는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선제 포격도발 이후 사건 자체를 ‘남북한 교전’으로 규정하고서 연평도 부근에서 남한이 먼저 포격하고 북한이 대응했다는 인식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통상 중국의 언론이 정부의 시각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주목됨.
- 그러면서도 중국 언론은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 8일 방한해 기자회견에서 한미 합동훈련이 자주 열릴 것이라고 한데 대해 “군사적 위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을 크게 보도했음.

● 中 다이빙귀 방북, 김정일 면담(12/09)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일 평양에서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다이빙귀(戴秉國) 국무위원을 만났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이 이날 방북중인 다이 국무위원을 접견했다고 전했다.
- 이날 접견에 중국측에서 장즈진(長志軍) 외교부 부부장,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아이핑(艾平)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치우위안핑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대사가, 북한측에서는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이 배석했다고 중앙통신이 밝혔음.
- 다이 국무위원은 방한후 귀국해 곧바로 방북을 시도했으나 김 위원장의 지방 현지지도 등을 이유로 방북이 미뤄져왔음. 다이 국무위원은 지난 8일 평양에 도착해 강석주 내각 부총리와 먼저 회담했으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북중 양측이 양자 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있는 대화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다이 국무위원은 방한 때와 마찬가지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음.

- 다이 국무위원이 김 위원장을 만나고서 후 주석의 인사를 전달하고 준비해온 선물을 전했으며, 이에 김 위원장이 사의를 표시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중앙통신은 이 자리에서 북중 양국이 친선 협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킬데 대해서와 상호 관심사인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담화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다이 국무위원이 논의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음.
- 다이 국무위원은 그러나 강석주 부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인해 한미, 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잇따라 열리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조치를 해서는 안 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다이 국무위원은 아울러 지난 7일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중국에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등의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해 내년 1월로 예정된 후 주석의 방미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연평도 포격사건후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에서부터 원자바오 총리, 다이빙귀 국무위원, 양제츠 외교부장,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외교부 대변인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채널을 통해 대화와 담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오고 있음.

● 다이빙귀, 외교부 홈페이지 ‘평화발전’ 강조(12/07)

- 중국 외교 실무사령탑인 다이빙귀(戴秉國) 국무위원이 ‘평화발전의 길 견지하기’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했음.
- 다이 국무위원은 A4용지 7페이지 분량의 글에서 우선 중국은 왜 평화발전의 길을 가야하는 지를 자문하면서 경제 글로벌화, 정보화 심화, 과학기술 등으로 세계는 이미 ‘지구촌’이 됐고 어느 국가도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치와 대립이 아닌 평화발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음.
- 그는 이어 중국은 평화, 자주, 과학, 협력 등을 바탕으로 한 평화발전의 길을 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국 인민이 빈곤에서 벗어나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하고 정치 발전을 이끌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 그는 중국의 평화발전 추구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계 패권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중국은



확장적 패권을 추구한 문화와 전통이 없다고 단언했음. 또 중국은 호혜적인 국제경쟁과 협력을 실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다이 국무위원의 이 글은 북한의 우리늄 농축 위협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규탄하면서 이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7일(중국시간) 한국·미국·일본 3국의 워싱턴 외교장관 회담 개최 전인 6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관심을 모았음.
- 다이 국무위원의 글에는 북한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중국식 평화발전의 길’을 강조함으로써 최근 한반도 위기고조 사태와 관련해 냉정과 자제를 통한 외교적인 해법을 찾자는 자국 주장을 부각시키려 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 中 “대화·협력이 유일한 ‘연평’ 해법”(12/07)

-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동북아에서 평화를 유지할 책임은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그러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관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모두가 책임 있고 이성적인 태도로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대화의 궤도로 올려놓는데 노력해달라”면서 “유관 각국이 중국이 제안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약에 대해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하며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장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북한의 우리늄 농축 위협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규탄하면서 이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한국·미국·일본 3국의 워싱턴 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으로서, 냉정과 자제를 통한 외교적인 해법이 최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됨.
- 최근 연이어 한미, 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열리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작금 조성된 긴장국면 해소에 노력해왔으며 한반도 문제는 대화로 해야지 대립을 통해서 풀 수 없다”는 말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음.

● “中, ‘대북 투자 위협’ 경고” < VOA > (12/7)

- 중국 정부가 북한 정세의 특수성과 불안정한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대북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밝혔다.
- VOA는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간한 ‘2010 대북 직접투자 안내서’를 인용, 북한이 직접투자 대상국으로 작지 않은 흡인력을 갖고 있지만 외부의 경제제재와 불안정한 남북관계 등으로 투자에 일정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VOA에 따르면 북한은 200여 종의 풍부한 지하자원, 질 좋고 저렴한 노동력, 정부 차원의 투자 장려책, 세목이 간단하고 세율이 낮은 세금제도,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소비재 공급부족에 따른 높은 시장 잠재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중국 상무부 안내서는 분석했음.
- 이 안내서는 그러나 외국인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북핵 문제,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상주 외국인 사업가수 제한 및 동향 감시 등을 대북 투자의 불안요인으로 꼽았다고 VOA는 설명했다. 안내서는 또 북한의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고, 정부 환율과 시장 환율 사이의 격차가 커 투자 수익금 회수시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북한 당국이 갑자기 화폐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안내서는 이밖에 북한 당국이 외부에 공개하는 물품 생산지, 생산량, 가격 등에 관한 통계가 내부용과 다르고, 투자 계약시 분쟁해결 합의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지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대북투자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음.
- 한편 VOA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2009년 중국 대외 직접투자 통계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액(586만 달러)이 전년(4천123만 달러)보다 급감했으며,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가 감소한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음.

라. 일·북 관계

● 日 “사격훈련 北 반발 주시”(12/6)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의 해상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경계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일·미·한(한·미·일)이 될 수 있는 한 긴밀하게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라고 밝혔음.
- 센고쿠 장관은 또 “(북한은) 지금까지 미·한(한·미) 합동군사훈련 때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훈련할 때 움직임을 보인 적이 많았다”며 경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 日 경찰, 北에 신발 등 수출한 재일동포 체포(12/6)

- 일본 효고(兵庫)현 경찰본부 외사과는 6일 북한에 일용품 수출한 혐의(외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로 조선적(朝鮮籍.무국적)인 전 무역회사 사장 김모(46.오사카시 이쿠노<生野>구)씨와 전 사원 류모(41)씨를 체포했음.
-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6월24일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발과 세면대, 폴리에스테르 직물 등 일용품 약 300만엔 어치를 일본 고베(神戸)항에서 중국 다롄(大連)항을 거쳐 북한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음. 이들은 이메일로 주문을 받은 뒤 북한 무역회사인 ‘조선신흥무역’에 화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음.



- 조선신흥무역은 국가안전보위부 계열의 회사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감시대상명단에 올린 회사임.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유씨는 “북한에 수출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지난 3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에는 제3국을 거친 대북 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마. 기 타

● 김의교 “美, 中에 분명하게 얘기할 것”(12/8)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8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14일 중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이 보다 분명한 목소리로 북한에 ‘도발을 하지 말라’고 하라고 강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 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차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 김 장관은 또 연평도 포격사건의 해법으로 대화를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은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중국은 크기 때문에 움직임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 그는 연평도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 “굳이 우리가 하라, 말라고 하지 않아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이 되면서 우리와 긴밀히 협의할 여지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는 한, 미, 일 외교장관 회담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중국과 협의하는 방안과 관련해 “한국에서 (협의)할 수도 있고 중국에 사람을 보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고,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제재가 이미 나와 있으니 기존 제재들을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오캄포 “北 연평도 포격 예비조사 단계”(12/08)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는 7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현재 수사 전단계인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 오캄포 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직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며 예비적인 자료 조사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이는 공식 수사에 착수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이번 예비조사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탄원이 아닌 한국의 시민과 학생들로부터 탄원을 받아 착수한 것”이라면서 “한국은 ICC 재



판소 설치근거인 ‘로마조약’에 서명, 비준한 당사국(State Party) 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것이 전쟁범죄의 성격이 있는지, 이 사건이 한국 영토에서 일어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캅포 검사는 북한 내부 또는 북한의 지도자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 “현재 검찰부는 로마조약 가입국인 한국의 영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 등과 관련한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북한은 로마조약 가입국이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부인했음.
- 현재 ICC 검찰부는 예비조사 대상으로 ▲한국 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2010년 11월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침몰한 사건 등 2건을 적시했음.

● <中, 한미일의 ‘역할’ 촉구에 무반응>(12/7)

- 중국 정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7일 연평도 포격 도발과 우라늄 농축 위협을 규탄하고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데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음.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2일 장위(姜瑜) 대변인을 통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지 않으면서 대립이 아닌 대화를 촉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한미일 3국이 주문하고 있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내부적인 정리를 거쳐 입장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정부가 통상 특정 외교사안에 대해 외교부로 견해를 발표하는 관례로 볼 때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각)로 예정된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됨.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언론매체들은 외신을 인용해 사실 위주로 보도하는데 그치고 있음.
-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일본의 교도통신이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포격도발을 규탄하며 다시는 그런 도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고 전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인터넷판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이라는 제목으로 회담 결과를 소개했음.
- 중국 매체들은 아울러 한국군이 다음주부터 동, 서, 남부 해상 27곳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우려를 표시했음. 그러나 사격훈련 예정지에 일단 백령도와 연평도 등이 포함되지 있지 않다고 전했다.



● 한·미·일, 中역할 촉구..“北 先도발중단 요구” (12/07)

- 한국, 미국, 일본은 6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우라늄 농축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중단과 국제의무 준수를 강력히 요구함.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은 이날 워싱턴에서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함.
- 3국 외교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공격에 대해 3국 장관들은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3국 장관들은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고, 북한에 대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음.
- 성명은 또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을 규탄했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위반으로, 3국 장관들은 북한에 대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음.
- 또 6자회담 재개문제와 관련, “장관들은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는 한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보여주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음.
- 3국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장관들은 북한 관련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고대했다”면서 “장관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언급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노력을 고대했다”고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관계

● 美합참의장 “北도발시 대응수단 한국 권리”(12/8)

-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8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수단은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있다”고 밝혔음. 멀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민구 합참의장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한 뒤 오후에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멀린 의장은 우리 군이 ‘북한의 선제공격시 항공기를 이용해 공격원점을 격파하는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에 항공력을 운용할 것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한미, ‘北 국지도발 대비계획’ 전면 보완 합의(12/08)

- 한·미 양국은 8일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합의했음.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정세를 공동 평가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합참이 밝혔음.
- 양측은 회의에서 북한의 내부 정세와 주변국의 여건상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에 의해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음.
- 특히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완됨. 이는 북한이 해상과 공중, 육상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군의 전력으로 작전을 주도하되 강력한 응징이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또는 한미연합사 전력을 동원하도록 대비계획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풀이됨.
- 특히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하부대에 지시한 ‘북한의 선제공격시 자위권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지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측은 북한이 남측을 선제공격하면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 전투기와 함포 등으로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 지침에 공감하고 이를 존중기로 했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미 군 수뇌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회동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한·미, 中상대 ‘연평도 대응’ 협의 착수(12/7)

- 한·미 양국은 6일(현지시각)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의 공동성명 발표에 따라 조만간 중국을 상대로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외교당국자가 7일 밝혔음. 이는 한·미·일 3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대북 압박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연평도 대응방향을 둘러싼 한반도 외교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핵심당국자는 “중국의 6자 긴급회동 제안과 최근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입장이 정리된 만큼 이를 자연스럽게 중국에 전달하며 향후 대응방향을 협의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국이 동참해줄 것을 적극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에 따라 미국은 내주중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급 방문단을 우리나라와 일본에 이어 중국 베이징(北京)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고위급 방문단은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전담하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3국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내주 중 오늘 회담에 이은 후속조치를 위해 고위급 대표단을 아시아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연평도 사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흐름에 동참하고 북한이 도발행위 중지와 비핵화의 실행적 조치에 나서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미국과는 별도로 외교채널을 통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중국에 설명하고 연평도 사태의 대응과정에서 적극적 협력을 요청할 방침임. 정부 당국자는 “연평도 사태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3국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향후 대처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고위급 방문단의 파견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한미 국민 중국에 대한 경계심 높아>(12/6)

- 제주 서귀포시 제주평화연구원에서 6일 열린 ‘한국 공공외교 포럼’에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국민 모두가 중국에 대해 높은 경계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었음.
- 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 연구원이 이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 연구 결과를 인용,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를 꼽으라는 질문에 한국인은 북한(55.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중국(24.5%), 일본(10.3%), 미국(8.2%), 러시아(1.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중국은 지난해 15.8%로 일본(17.6%)에 이어 3위였으나 올해는 9% 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음. 또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중국이 어느 나라를 도울 것인지 묻는 항목에서는 북한(55.6%)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2007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응답이 50~56%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37.3%로 최저를 기록했다.
- 아울러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도울 나라로 한국을 꼽은 응답은 올해 74.7%를 차지해 작년 65%보다 9.7% 포인트 상승했음. ‘미국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는 ‘협력대상’(76.4%)이란 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쟁대상’(14.6%), ‘경계대상’(8.2%), ‘적대대상’(0.8%) 등의 순이었음.
- 이와 함께 캐트린 케츠 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미국 국민 2천596명을 대상으로 한 ‘미국민의 한국에 대한 태도 조사’ 발표를 통해 미국인의 여론 동향을 소개했음. 발표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 후 한미 동맹 유지 필요 여부를 묻는 항목에 대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상군을 유지해야 한다’(43%)는 답이 다수를 차지했고, 다음은 ‘동맹은 유지하되 지상군은 철수해야 한다’(37%), ‘동맹도 끝내고, 지상군도 철수해야 한다’(14%)는 순이었음.



- 또 미군 기지를 유지해야 할 국가로는 한국이 62%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이어 독일과 아프가니스탄(각각 52%), 이라크와 일본(각각 50%), 파키스탄(45%), 터키(43%) 순으로 나타났음.
- 미국의 대북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종결하도록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고 ‘북한 정권 교체를 유도해야 한다’(19%),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18%)는 등의 의견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음.
-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고 가정할 때 미군의 개입 여부를 두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유엔의 지지를 얻어 공격을 물리쳐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비율이 61%, ‘미군을 동원해야 한다’에 찬성한 비율은 40%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음.
-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야 할 국가로는 일본(52%)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인도(45%), 한국(42%), 중국(37%), 콜롬비아(35%) 순으로 나타났음. 캐츠 전 보좌관은 “한국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FTA 체결 자체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나. 한·중 관계

● “中, 한국에 ‘다이빙귀 방북’ 결과 설명”(12/11)

- 정부가 지난 9일 이뤄진 다이빙귀(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면담 결과를 중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중국이 어젯밤 외교 경로를 통해 다이 국무위원의 방북결과를 우리 정부에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다이 국무위원의 방북 결과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이 당국자는 면담결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북한의 입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다른 정부소식통은 “북한이 다이 국무위원에게 연평도 포격, 핵문제 등과 관련해 통상하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한 것 같다”며 “연평도 포격도 한국이 먼저 도발한 것에 대한 대응차원이라고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다이 국무위원과 면담에서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미국과 한국으로 돌리면서 ‘핵억지력’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강조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앞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10일 평양에서 가진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남한이 북조선에 대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선군 정책을 향한 우리의 선택과 핵억지력에 기초한 다각적 자위력 강화가 옳았음을 다시 한 번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다만 정부소식통은 중국이 최근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협 의에 대해선 “북한이 다이 국무위원과 면담에서 상대적으로 전향적 인 태도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9일 다이 국무위원이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북-중 양측이 양자 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대화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고 보도했었음.

● 외교부 내년 對中예산 6.7배 ↑ ..중국분석팀 신설(12/10)

- 외교통상부는 10일 내년도 예산에서 대(對) 중국 외교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사회 에서 영향력이 큰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이 올해 3억 9천만원에서 6.7배 늘어났다”고 말했다.
- 외교부는 현재 동북아시아국 산하의 중국과를 현재 한개에서 2개로 확대하고 중국의 국내정세, 대외관계 등을 신속히 파악하는 중국분 석팀을 만들어 정책에 활용할 방침임. 또 중국의 역사, 문화, 여론동 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반한정서 관리팀’을 운영하는 한편 현 재 차관급으로 돼 있는 한.중 고위전략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對)중국 외교정책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외교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1조5천204억원에서 14.7% 늘어난 1조7천444억원으로 확정됐음. 이에 따라 외교부 예산 은 2009년부터 3년 연속 10% 이상 증가했고 내년의 경우 전체 정부 예산의 0.83% 수준으로 올라갔음. 특히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검 증 사업에 7억 8천만원이 새로 편성됐음.
- 외교부는 내년에 범정부 차원의 북핵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북핵 문제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 진 중임. 또 신규사업인 재외공관 세일즈외교 사업에 15억을 편성했 고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예산은 12억 9천만원으로 확정됐음. 아울 러 자원외교 등의 차원에서 아프리카·중동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예산이 올해 1억 9천100만원에서 내년에 4억 9천100만 원 으로 늘었고 중남미지역과 교류사업도 9억 2천900만원에서 21억 100만원으로 증가했음.
- 이와 함께 외교부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계획에 따른 무상 원조 예산은 올해보다 638억원 증액됐고 유엔 정규예산 및 평화유 지군(PKO) 분담금 등 국제기구 분담금은 708억원 늘었다고 밝혔음.

● 고위 관리, “中다이빙귀, ‘연평도’ 한마디도 안했다”(12/9)

- 중국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 통령과 면담할 당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대해 일체 언급 을 하지 않았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9일 밝혔음.



-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다이 국무위원이 당면한 현안인 연평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은 형제인데 긴장이 격화되면 손해 아니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했다”며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싸우지 말자’는 말만 되풀이한 것”이라고 전했다.
- 그는 “중국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증거가 없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해 ‘민간인이 보고 온건데...’라는 식으로 대응했고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는 ‘(도발의) 전후맥락이 있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식으로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 그는 “중국과 대립하기 보다는 관계를 잘 맺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아침에 연락하고 오후에 면담하자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다이빙귀 국무위원의 전격적 방한일정 추진을 지적했음.
- 그는 “중국이 도덕적·법적으로 자신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은 중국의 주장이 사리에 맞지 않아 입장이 좋지 못하다”며 “중국으로서도 괴로울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미국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음.
- 그는 또 앞으로 중국이 북핵을 용인할 경우의 한반도 상황을 묻는 질문에 “10~15년 후에 그런 상황이 현실화됐다고 가정했을 때 한·일이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라며 “중국이 그때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 사회도 지금은 핵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가면 핵이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中언론 “韓 아슬아슬한 모험게임”(12/7)

- 중국 반관영언론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7일 한국이 6일 서해 대청도 등 29곳의 해상에서 실탄사격훈련을 한 데 대해 “한국이 아슬아슬하게 모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논평했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이 신문은 이날 이러한 제목의 1면 톱기사에서 한국은 남북한간의 분쟁도서를 포함한 해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실탄발사훈련의 모험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한국이 이날 실탄발사훈련을 할때까지 북한이 보복 대응할 확률이 1%가 넘었다고 지적하고 전략분석가들에 따르면 전쟁 발발 위험 1%는 99%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남북한이 서로 아슬아슬하게 모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반도가 세상사람들이 놀라 내미는 긴 헛바닥처럼 생겼음을 연상케 한다고 신문은 비꼬았음.
- 신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전화 통화에서 전적으로 한반도문제를 논의한 것은 한반도의 포성이 세계 멀리까지 미침을 나타내준다고 설명했다.
- 신문은 또 한미일이 이날 중국을 제외하고 워싱턴에서 3국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한 것은 한미일 3국이 어쩔 수 없이 냉전체제아래 사



태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음.

- 신문은 한국이 이번 훈련에 아무런 위협이 따르지 않으며 한국 영해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한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 한·일 관계

● <日총리 ‘자위대 발언’에 당국자들 “뜬금없네”>(12/12)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1일 한반도 유사시 남북 피해자 구출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측과 논의하겠다고 발언한데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한마디로 “뜬금없다”는 반응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된 적이 없는데다 일본 내부에서 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안보현안을 일본 내각수반이 공개석상에서 불쑥 제기한 것이 당혹스럽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음.
- 정부의 핵심 당국자는 12일 “우리 정부와 사전에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민감한 안보현안에 대해 일본 총리가 그 같은 발언을 불쑥 꺼낸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연평도 사건 이후에 일본이 한·미·일 3각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그것도 우리와 사전 상의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밝혔다.
- 한 외교소식통은 “남북피해자 가족들과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실언’으로 보이며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특히 일본 언론 대다수가 헌법상의 문제를 들어 비판하는 것을 보면 간 총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내놓은 발언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 외교가에서는 간 총리의 이번 언급이 일본 국내를 겨냥한 정치적 성격의 해프닝성 발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정권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민주당 정권이 연평도 사건 이후 국내 보수층을 겨냥해 내놓은 돌출발언이라는 것임.
-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언을 최근 일본측이 한·일 방위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연관지어 보는 시각들도 대두되고 있음. 한 소식통은 “일본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가일층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방위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일본 민주당 정부의 향후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日 언론 “한국의 자위대 거부감이 문제”>(12/12)

- 한반도 유사시에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를 한국측과 협의하겠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언론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 도쿄신문은 12일 일본이 한국측에 자위대 파견 방안을 이미 타진했다고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음. 이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1999년 주변사태법 제정을 계기로 한반도 유사시 공항이나 항구가 있는 서울, 인천, 부산에 일본 정부 전용기나 수송기, 자위함을 파견해 일본인을 실어나른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덧붙였지만, 일본이 구체적으로 이같은 계획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타진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음.
 - 요미우리신문은 간 총리가 북한의 연평도 공격 직후 일본인 구출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미국과 일본이 1997년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유사시 한국에 있는 일본인 구출 계획을 협의한다고 명시했고, 이후 비전투원 피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왔다고 밝혔음.
 - 요미우리는 ‘최대의 문제점은 한국측이 자위대 파견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문제라고 지적했음. 자위대가 한국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대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일본이 과거 한국측에 이같은 문제를 협의하자고 말을 꺼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경위도 전했다.
 - 산케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촉구한 점을 거론하며 “일미(미일), 미한(한미)의 합동훈련에 일한(한일)이 서로 읊서버로 참가한 것은 ‘중요한 일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일미한이 실효성 있는 협력을 심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일본의 방위강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도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日총리 ‘한반도 자위대 파견 검토’ 발언 논란(12/11)**
-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등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해 일본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
 -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10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 구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한(한일) 사이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 간 총리는 또 “북한이 한국 영토에 포격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졌다”며 “만일의 경우에는 북(북한)에 있는 납치 피해자를 어떻게 해서 구출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일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현실성이 없는 발언이고, 헌법과 자위대법을 어길 가능성도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음. 마이니치신문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나 자위대법은 전투 지역에서의 자국민 구출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총리의 발언은 한반도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을 경유해 북한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의 헌법 해석을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음.
-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자위대법은 해외에서 긴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라도 안전이 확보된다는 걸 전제로만 자위대가 자국민을 수송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반도) 유사시에 안전이 확보될 리가 없지 않느냐. (총리의 발언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방위성 관계자의 코멘트를 소개했음.

● <한미연합훈련에 日 참여 가능성은>(12/8)

-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8일 한미연합훈련에 일본의 참여를 희망해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멀린 의장은 이날 한민구 합참의장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대비계획과 훈련, 연습은 지금 같은 신속한 위협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월터 샤프 연합사령관이 세부적인 내용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와 같은 연습훈련에 주변국과 동맹국, 특히 일본이 참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발언임.
- 멀린 의장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자위대 수뇌부와 회담할 계획이어서 자신의 이런 희망을 일본 측에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 군은 미국 태평양에서 실시되는 환태평양훈련(림팩) 과정에서 일본측과 수색, 구조훈련을 하고 있지만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멀린 의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일단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일본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자위대의 외연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대중국 및 대러시아 외교에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
- 군 고위 관계자는 “멀린 의장이 자기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일체 논의된 것이 없었다”고 전했음. 이 관계자는 “일본과 훈련을 한다거나 한·미·일 3국 훈련은 논의되지 않았고 고려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음.
- 이에 군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한미동맹체제 속에서도 충분한 연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미측은 일본을 훈련에 참가시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일 국방당국은 1994년부터 국방장관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4월 일본에서 열린 제14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정례협의체 운용과 인적 및 교육교류,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 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음. 실무차원에서는 국방정책실무회의, 안보정책협의회(외교+국방), 국방교류협력실무회의 등의 운영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李대통령 “한일, 과거 닫고 미래 향해야”>(12/6)

-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일한협력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를 청와대로 초청해 접견했음.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이제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양국의 강한 협력이 양국의 번영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동아시아의 평화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음.
- 이 대통령은 “우리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의견을 놓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최근 한국에 여러 사태가 생겼을 때마다 일본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한국정부를 지지하는 가까운 나라의 역할을 해 줘 감사하다”고 밝혔음.
- 이 대통령은 지난 1969년 창립한 일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 문화, 기후 변화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음.
- 이에 대해 나카소네 전 총리는 “북한의 도발, 폭력행위에 대해 우려했지만 이 대통령이 완전한 대응을 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면서 “아울러 많은 피해를 입은 한국민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답했음. 위원회 협력위원회의 우리측 회장인 남덕우 전 총리와 이승윤 부회장 등이 참석했음.

라. 미·중 관계

● 美 “미-중, ‘北도발중단.비핵화’ 이해 공유”(12/11)

- 미국은 10일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는 미국과 중국이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기대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주로 예정된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 기회를 통해 다이빙귀 국무위원의 방북 결과 및 북한 지도부의 생각에 대한 중국의 평가를 전해듣기를 미국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우리는 (중국과)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역내의 안정을 원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또 북한이 비밀리에 미얀마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여주는 미 외교전문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것에 대해 “우리는



북한과 버마(미얀마)간의 관계를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 “위험한 기술의 확산자로서의 북한의 과거 때문에 우리는 버마와 북한간 관계의 본질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 “美中, 류샤오보 석방 초기부터 갈등”(12/9)

- 미국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가 체포된 직후부터 중국 정부에 줄기차게 그의 석방을 요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주중 미국 대사관이 류샤오보가 체포된 2008년 말부터 자국 대사 명의의 서한을 잇따라 중국 정부에 발송해 류샤오보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는 내용의 외교전문을 공개했다.
- ◇美中 류샤오보 갈등 지속 = 클라크 란트 당시 주중 미국대사는 류샤오보가 중국의 민주화 요구를 담은 ‘08헌장(Charter 08)’ 발표를 주도하면서 체포된 지 2주가 지난 2008년 12월말 중국 정부에 그를 즉각 석방하고 평화적인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 현 주중대사인 존 헨츠먼도 지난해 부임한 직후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음.
-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북미대양주사(司) 덩샤오윈(丁孝文) 부사장 명의의 답신을 보내 “인권을 핑계로 삼아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고 외교문서는 전했다.
- 미국 정부의 석방 요구는 류샤오보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뒤 중국 관리들이 그는 범죄자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분노를 표출하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음. 미국 외교관들은 현재 그의 아내와 친구들과 접촉하며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중국 정부에 류샤오보 사태를 재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 ◇美 “중무기, 이란 공급 중단해야” 항의 =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이란에 공급한 무기가 이라크 저항세력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 중국 정부에 항의했다는 사실도 위키리크스 폭로를 통해 드러났음.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2008년 5월 13일자 주중 미국 대사관의 전문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은 이라크 바스라 지역에서 이라크 시아파 반군의 무기 은신처를 발견했음. 이곳에서 중국이 제조해 이란에 공급한 ‘QW-1’ 휴대용 견착식 대공미사일 2기가 발견됐다는 것임.
- 미국은 이 무기가 이라크 등 곳곳의 반군과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란은 주요 테러지원국 중 하나라면서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했음. 그러나 중국은 이란에 대한 무기 판매는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으로 최종 구매자로부터 무기를 다른 곳으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외교전문은 전했다.
- ◇ “중국의 자원 외교 ‘도덕성 상실’” = 중국이 아프리카 각국에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펼치는 데 대해 미국이 도덕적 개념을 상실했다며 강하



게 비판한 사실이 새롭게 공개됐음. 미국 국무부의 조니 카슨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는 지난 2월 나이지리아에서 석유 관련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중국은 아무런 도덕적 개념이 없다”면서 “아프리카를 위한다는 이타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고 중국을 위한다는 생각만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 이 내용은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외교전문에 담긴 것으로 위키리크스를 통해 이번에 공개됐음. 카슨 차관보의 이런 비판은 중국이 자원 확보를 위해 수단과 짐바브웨 등 독재국가 지도자들을 지원한다는 서방의 비판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중국이 아프리카 지원을 통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임.
- 카슨 차관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프리카에 대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도입을 계속 요구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외교문서는 전했다.

● 美 “中, 도하 협상 매우 협조적”(12/9)

- 미국은 도하 협상을 회생시키려는 최근 중국의 “매우 건설적”인 태도에 고무돼 있다고 마이클 핑크 세계무역기구(WTO) 주재 미 대사가 8일 밝혔다.
- 핑크 대사는 이날 로이터와의 회견에서 “지난 몇주와 몇달간 중국이 보인 매우 건설적인 태도에 미국이 고무됐다”면서 “이런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접근”은 WTO 주요국 소그룹들의 잇단 회동이 도하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은 브레인스토밍(회의에서 차례로 의견을 내고 여기서 최선의 방안을 고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탐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과 중국은 내주 중국에서 핑크도 참석하는 고위급 양자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WTO의 153개 회원국들도 제네바에서 이달과 내달 소그룹들이 일련의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 핑크는 주요 20개국(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담에서 도하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정치적 시그널을 받았다”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현실적인 협상으로 동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나 인도와 브라질의 경우 협상에 대한 자세가 덜 명확하다면서 브라질이 대선 후 정권 교체기임을 상기시켰음. 인도의 경우 협상에 대한 강한 의지가 표명되다가도 어떤 때는 그 강도가 덜한 것같은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핑크는 미국도 현재로서는 중국, 인도 및 브라질 어느 나라와도 “막판” 국면 진입을 의미하는 실질적인 협상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 그는 지금이 전반적인 ‘주고받기’를 시작해야 하는 국면이라면서 예를 들어 농업 보조금을 줄이는 대가로 자동차 개방을 확대하는 식의



-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石垣)시 시의원들인 나카마 히토시(仲間均.61)씨와 미노소코 요이치(箕底用一.29)씨는 10일 오전 9시께 다오위다오의 한 섬인 난샤오다오(南小島:일본명 미나니코지마)에 상륙했음.

● 주일 中대사 “한미일, 中에 책임전가 이해못해”(12/10)

- 청용화(程永華) 주일 중국 대사가 한미일 3국이 북한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음.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청용화 주일 중국 대사는 지난 8일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이 중국에 영향력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음.
- 그는 “의견이 있다면 직접 북한에 대고 말하는 것이 좋다.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서 ‘중국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주장했음. 이는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한중일)이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임.
- 청 대사는 일본이 중국의 해양진출 등에 대응해 난세이(南西)제도 등의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보는 것은 상호신뢰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음.
- 센카쿠(尖閣 :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선박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중일관계가)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로 매우 유감”이라면서 “상호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 중·러 관계

● 러, 中헤이룽장에 연간 43억kW 전력 공급(12/08)

-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잇는 전선망 구축 사업이 완료돼 내년부터 연간 43억kW의 러시아 전력이 중국에 공급된다고 홍콩강일보가 8일 보도했음.
- 신문은 러시아 극동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을 잇는 2천345m의 송전선 설치 공사가 최근 완공됐으며 이 전력망은 500kV의 전압으로 송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해외 전력을 끌어오는 전력망 가운데 최고의 전압임.
- 이 전력망을 이용해 연간 43억kW의 러시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헤이룽장 일대의 전력난 해소는 물론 세계 4위 규모의 전력 시스템을 갖춘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전력 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음.
- 이번 중·러 전력망 구축 사업은 러시아가 송전망 설계와 광케이블 설치를 맡았고 중국은 도선 절연체와 금속 부품 공급을 담당했음.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OC)와 러시아 최대 석유·가스 생산



업체인 가스프롬이 지난 9월 시베리아에서 중국 서부 국경을 잇는 ‘알타이 가스관’을 건설, 2015년부터 연간 300억㎥의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하는 등 최근 중-러간 에너지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음.

아. 일·러 관계

● 美日 훈련지역에 러 전투기 출현(12/8)

-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과 일본이 합동 훈련을 벌이는 동해 상공을 지나가는 바람에 훈련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NHK와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해상 초계기인 IL-38 2대가 6일 오전 9시께 미일 양국이 합동훈련을 벌이는 일본 노토(能登)반도 부근 공해 상공에 나타났음. 이중 한대는 남쪽, 한대는 북쪽으로 교차하듯 날아갔고, 낮 12시께 모습을 감췄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 당시 이 부근에서는 미사일방어(MD) 체계와 관련된 작전에 참가중인 이지스함이 적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대처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지스함이 가상 적기 역할을 맡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대해 ‘함대공(艦對空)’ 공격을 하는 훈련을 앞두고 있었지만 러시아 전투기가 갑자기 나타난 탓에 훈련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훈련을 중시하는 일본 방위성측은 오리키 료이치(折木良一) 통합막료장(합참의장)까지 부근 이시카와(石川)현의 공군자위대 고마쓰(小松) 기지에서 참관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자 “명백한 훈련 방해행위”라고 반발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 산케이신문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이 지난 4일 러시아와 영토 분쟁 대상인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헬기를 타고 시찰한데 대해 러시아 군이 대항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고 풀이하기도 했음.
- 이에 대해 한국 공군 관계자는 “영토에 해당하는 영공이나 영공 밖의 방공식별구역에 외국 비행기가 허가 없이 들어오는 것은 몰라도 공해 상공을 지나가는 것을 국제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며 “러시아 전투기가 공해 상공을 지나가다 합동훈련 중인 타국 전투기와 마주친 일은 전에도 있었다”고 말했음. 한편 이번 미일 합동훈련에는 한국군 관계자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 기 타

● <中, 韓美日 ‘공조긴밀화’에 경계심>(12/10)

- 중국이 10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연평도 포격사건후 한국·미국·일본 3국의 ‘공조 긴밀화’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음. 신화통신은 이날 A4 10페이지가 넘는 장문의 기사로 최근 3국의 잦은 모임이 동맹 결속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쇼에 불과한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썼음.



- 려는 의도를 비치고 있으나 이런 방법으로는 동북아의 안정을 이룰 수 없고 한반도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 통신은 또 동북아에서 한미일 3국은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동맹화' 경향이 오래 지속될 수도, 굳건할 수도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의 3국의 공조 긴밀화를 일종의 '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